

## 중소기업 2題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앞줄 왼쪽 2번째부터)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 육아휴직 활용 부담 안되게 지원강화·노동규제 완화를

### 중기중앙회-저출산고령사회위 간담회 대체인력 확보 지원 등 건의사항 전달

중소기업계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전체 일자리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 강화와 적극적인 노동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유관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주형환 부위원장과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이 자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맡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당장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곳이 많은데, 일·가정 양립제도가 강화되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동료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겪게된다”며

서 “계다가 중소기업들은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노동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이 중소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 강화와 함께 노동규제도 시급히 완화돼야 한다. 중소기업인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 환경도 조성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만큼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체인력 확보 지원(채용지원금 인상 및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보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집행단계서 성과 결정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대책 준비상황 점검  
“직원 사전교육, 진행과정 면밀 점검해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성과는 집행 단계에서 결정된다. 집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정부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발표한 관련 대책 점검 자리에서 “소진공 본부는 ‘정책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본부와 지역센터는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부 상담과 유관기관과의 연결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진공에서 집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정책까지 상담해야 하는 만큼 타부처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직원 사전 교육과 시범 실시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는 지방중기청, 소진공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센터 등의 준비 상황을 들여다보고 기관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오장관과 지방중소기업청장,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지역본부장, 신보중앙회 이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센터장들은 영상으로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경영 부담 완화 ▲재기 지원 ▲성장 촉진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 상황도 체크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중기부

앞서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 매출 지원 확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업종별·분야별 진단을 통한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의 성장(Scale-up) 지원 ▲유망 소상공인의 해외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창업·재창업 연계 지원 ▲채무 일시상환 부담 완화 등을 통한 폐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오 장관이 취임 후 지난 1월부터 ‘우문현답’ 간담회 등 각종 현장 방문에서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됐다.

오 장관은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5일), 소진공 서울서부센터 방문(11일), ‘우문현답’ 개최(12일) 등을 통해 현장 소통과 집행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소진공은 지난 6월 대전 중구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이전했다.

이날 자리는 소진공 본부가 대전 내에서 이전한 후 주무부처 장관까지 참석해 진행한 첫 외부행사다.

/김승호 기자

## “AI 기술로 해결” vs “사회적 합의가 먼저” CJ대한통운, 친환경 물류 등 추진방향 설정

### ‘사이버 불링’ 범죄 해결방안

인텔, AI 실시간 판정 기술 개발 중  
美 액티비전 ‘모톡스’로 제재 가능  
“AI의 오류 논의 먼저 선행돼고  
사회·이해관계자 영향 검토해야”

온라인 게임 채팅 내 폭언, 욕설 등을 일삼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반면, 기술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논란도 나온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2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한 달간 피해자에게 조롱 섞인 폭언 메시지를 221차례 보내며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인터넷 상의 지속적 괴롭힘)’ 범죄를 저지른 것.

해당 사건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한 행위도 실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

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 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불링 문제는 고질적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게임 이용자의 56.2%가 게임 내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언어 폭력 83.9%, 스토킹 57.2%, 명예훼손 39.3% 비율을 차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처벌 법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율은 가시적으로 줄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이버 불링의 해결점으로 AI 기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 인텔은 2019년부터 사이버 불링에 대한 해결책으로 AI에 주목했다. 당시 인텔은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영국의 스피릿 AI와 공동으로 폭언 및 비방을 일삼는 게이머를 AI가 실시간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미국 게임사 액티비전이 온라인 게임 내 욕설 및 폭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능을 도입했다. 액티비전은 FPS 게임 ‘콜 오브 드uty’에 이용자들의 음성 채팅을 모니터링하고 악성 이용자 제재할 수 있는 AI ‘톡스모드’를 적용했다. 톡스모드는 문제 가 되는 채팅 내용을 추출해 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의 브리검영 대학교와 듀크대학교 연구원들이 사이버 폭력에 맞서 올바른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AI 활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사이버 불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사이버 불링이 아닌데 AI가 사이버 불링이라고 잘못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기술을 도입했을 때 이 기술이 사회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영향도 평가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s4187@

###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CJ대한통운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데이터 공개 범위를 해외 주요 진출국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ESG 경영을 강화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ESG 경영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번 보고서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전달하는 기업’이라는 ESG 경영 목표에 따라 ▲친환경 물류 ▲상생 생태계 조성 ▲신성장동력 확보 등 ESG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또 핵심사업인 물류업을 통해 환경, 사회적 가치를 창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스마트 물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그간 국내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던 데이터 공개 범위를 주요 해외 진출국 미국·인도·베트남까지 확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CJ대한통운 O-NE 배송차량.

앞으로 해외 현지에서의 ESG 경영 및 관련 지표 관리를 한층 고도화하고, 지속가능경영 평가 범위도 전 해외 법인을 대상으로 순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팩트 스토리’ 카테고리를 신설해 친환경 노력과 성과를 소개한 것도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다.

이외에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업,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안전보건, 인재경영, 노동관행 등 6대 중대 이슈를 설정하고 이슈별 접근전략, 재무·사회·환경적 영향, 리스크 관리 체계 중장기 목표도 공개했다.

/김승호 기자